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추진부서 | 경기도 화성시 前맑은물시설과 ☎031-5189-6184

개선배경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은 총 3개 분야*(①상수도관망의 세척, ②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③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로 분류되어,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도록 정함

〈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 〉

구분		①상수도관망의 세척	②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 복구 등 누수 관리	③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계	14명	4명	6명	4명
상수도관망시설		1명	1명	1명
운영관리사 1급 상수도관망시설		2명	2명	2명
운영관리사 2급 건설기술인		1명	1명	1명
*누수복구시 건설기술인			2명	

* 누수복구시의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

- 기존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시행하고 있었으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긴급 누수복구공사가 가능하도록 「수도법」의 개정됨
- 이로 인해 기존 상하수도 설비공사사업자는 누수복구공사에 대한 자격이 발탈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긴급 누수복구공사가 가능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가 절대적 부족하게 되었으며,
-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일부 업체가 긴급 누수복구공사를 독점하여 수주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

개선내용



- 긴급한 누수복구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에서 제외

〈수도법 개정(안)〉

개선 전	개선 후
<p>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p>	<p>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p> <p>①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다만,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p>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시 인력 및 설비요건 완화

〈수도법 시행령〉 별표2의 3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p>(신설)</p>	<p>2.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제2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1호가목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p> <p>가. 2개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부터 3)까지를 합하여 최대 1명까지</p> <p>나. 3개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부터 3)까지를 합하여 최대 2명까지</p>

개선 전

1.1.라. 등록신청서 작성·검토

(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

② 등록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양식에 상수도관망의 세척 분야,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분야,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분야를 구분하여 신청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업무 수행시 각 분야마다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관련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서 각 분야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

※ 두 개 이상 분야 중복 신청 시 기술인력과 장비는 신청 분야에 필요한 기준인력과 장비(분야별 장비요건)의 수를 합산한 수만큼 보유하여야 함

개선 후

1.1.라. 등록신청서 작성·검토

(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

② 등록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양식에 상수도관망의 세척 분야,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분야,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분야를 구분하여 신청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업무 수행시 각 분야마다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관련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서 각 분야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

※ 두 개 이상 분야 중복 신청 시 시설·장비 기준은 중복을 허용하되, 기술인력은 두 개의 분야 신청시 1인, 세 개의 분야 신청시 2인까지 중복 허용

추진과정



- ('23. 8.21.) 규제개선 건의(市→환경부)
 - 긴급누수복구 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외 및 인력기준 완화 요청
- ('23.10.19.) 행안부-道-市 현장방문 합동회의(업체 대표 참석)
- ('23.11.03.) 전국 지자체 대상 상수도분야 현안사항 제출(市→한국상수도협회)
- ('23.12.28.)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2개 분야 등록 시 인력 및 장비 중복허용
- ('24. 3. 26.) 「수도법」 개정 관련 환경부 주관 설명회 시 규제완화 건의
- ('24. 4.) 「수도법」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 긴급한 누수복구는 상수도설비공사사업이 시행함이 타당함
- ('24. 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긴급한 누수복구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제외
- ('24. 8.17.) 「수도법 시행령」 개정완료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2개 분야 등록 시 인력 및 장비 중복허용
- ('24. 9.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개선효과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시 인력 및 설비기준 완화로 투자비용 감소 등 기업의 부담 대폭 감소
- 전국 상하수도설비업 8,700여 업체의 누수복구공사 자격 회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의 누수복구공사 자격 복원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 가능

〈누수복구공사 현장사진〉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고민을 해결하다.

경기도 화성시 前 맑은물시설과 김성규 ☎031-5189-6184



화성시 맑은물시설과에서 근무기간 내에 금번 규제로 인하여 업체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전준비와 현장의 이해없이 만들어진 이중규제로 인하여 기존 상수도 누수 복구업체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해야만 했습니다.

투자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되었고 상수도누수복구 업무에 차질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행정의 규제로 인하여 사업자의 부담과 더불어 시민의 불편이 함께 이어지다보니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규제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지침의 개정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에 따른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긴급 누수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아닌 종전과 같이 상수도설비공사 업자가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수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2024년에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상수도설비공사업을 보유한 총 8,700여 개의 업체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없이 누수복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투자 비용 등 기업 운영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라며,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누수복구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곳곳에 숨겨진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